

궁금하신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노동상담
지금 클릭하세요

소식

성명·보도

공지사항

성명·보도

기타 공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동조단식 선포 기자회견문]

작성일 2014.07.18 작성자 대변인 Views 3630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동조단식 선포 기자회견문]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세월호 가족의 마음으로, 국민의 힘으로, 4·16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가족들 곁에서 단식에 돌입합니다.

어제는 제한절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국가에 있음을 선포한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지 6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자식을 잃고도 국기마저 끊어가며,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한 나라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구하던 두 명의 부모님이 탈진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다가오는 7월 24일 세월호 참사 100일을 앞두고 세월호의 진상을 밝혀줄 특별법이라도 제정해서 죽어간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고자 했던 유가족들을 대통령과 여·야 당은 끝내 외면했습니다. 7월 16일 까지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가족의 마음으로 동조단식에 돌입합니다. 제아무리 마음을 다해도 가족들의 애절한 가슴에 닿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4·16특별법을 제정하여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여,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없는 안전사회를 만들겠다는 마음만은 가족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가족의 마음으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단식에 돌입하고자 합니다.

기소권과 수사권이 없는 특별위원회는 결코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재발방지대책이 없는 특별법도 껌데기일 뿐입니다. 정치권은 6월 임시국회에서 진실을 밝혀달라는 핵심적 요구는 모두 빼고 엉뚱한 내용만 논의하고 합의하다 끝냈습니다. 정치권은 모두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특히 '사법체계가 흔들린다' 운운하며 수사권조차 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 새누리당은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처음 시행할 뿐이지 수사나 기소절차 모두 형사소송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전례가 없다는 것이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 자체가 4월 16일 이전처럼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전례 없는 일입니다. 전례 타령하다가 국민 목숨이 모두 죽어갈 형편입니다. 새누리당은 진상규명의 칼날이 현 정부와 청와대로 향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새누리당과 정부는 세월호 가족들이 전국을 누비며 받은 350만 국민의 이름으로 청원된 4·16 특별법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약 이 참혹한 참사가 잊혀지기만 기다리는 것이라면 결국 더 큰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합니다.

국민 여러분, 7월 19일 서울광장으로 모여 주십시오. 역사상 두 달이라는 짧은 시간에 350만 명의 국민이 함께 청원한 법률이 있었습니까? 세월호 가족들이 눈물과 땀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서명을 받은 4·16 특별법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식과 가족을 잃은 설움에 심신이 지친 유가족들이 국회와 광화문에서 노숙과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세월호 가족들의 목소리에 우리 국민들이 답을 해야 할 때입니다. 7월 19일 오후 4시, 서울광장에서 기다리는 세월호 가족의 곁에 앉아주십시오. 국민이 유가족이고 유가족이 국민임을 선언합니다. '특별법을 제정하라!' '진상을 규명하라!'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국민의 함성이 광장에 가득 메워질길 기대하겠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4·16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합시다.

끝으로, 어제 안타까운 추락사고로 순직한 다섯 명의 소방관들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참사가 없는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약속합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4·16특별법 제정하라!
4·16특별법 제정으로 안전사회 건설하자!

2014년 7월 18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등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동조단식 선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List



민주노총 노동상담 1577-2260

[부설기관](#) [민주노총 소개](#) [오시는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고유번호 : 107-82-08139

Tel : (02) 2670-9100 Fax : (02) 2635-1134 Email : kctu@kctu.org

[민주노총 가맹조직 사이트](#)

[민주노총 지역본부 사이트](#)